

전북도 수출시장 다변화로 '100억원 수출계약 쾌척'

비엔비·마르페·바이허브·호원정공 등 수출 기업 5개사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일본, 방글라데시 등 수출길 활짝

전도내 중소 수출기업 5개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탈리아 등 5개국 바이어와 10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비엔비(주) 등 도내 중소기업 5개사가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일본, 방글라데시 등 해외 유력 바이어와 100억원 상당(US\$9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전북형 수출비우려사업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미국, 중국 등 도내 주요 수출국의 부상인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와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바이어 발굴과 1:1 매칭 상담 등을 지원하여 이루어 낸 값진 성과이다.

이번에 3년간 5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비엔비(주)(군산 소재)는 콘크리트 혼화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북형 수출비우려 사업을 통해 이탈리아 바이어인 MS of SELECT사와 첫 미팅 이후 원재료 독점 계약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또한, 전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마르페(재활의료기기 수출)가 중국 바이어와 바이허브주식회사(화장품 수출)가 베트남 바이어와, 휴먼파아코스텍

주식회사(마스크팩 수출)가 일본 바이어와, 군산 소재 주식회사 호원정공(특장차 수출)이 방글라데시 바이어와 각각 1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주)호원정공은 그 동안 간접수출(OEM방식)에 의존하였으나 독자적인 수출길에 나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5개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일찍이 전문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맞춤형 신제품 개발에 앞장서 온 기업으로,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 계약은

계기로 유럽과 동남아시아 진출에도 성큼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수출 계약은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지화 기술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완주군 자동차산업 활성화 본격 시동

정치권·기업·학계 등 참여한 '자동차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완주군이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완주군은 완주군청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현대자동차전주공장 공장장 현대자동차전주공장주공위원장회장 등 정치권, 기업,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군 자동차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18일 열었다.

이번 완주군의 상생발전협의회는 정치권과 기업, 노조까지 함께하면서 특이나 주목을 받았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완주군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성장사업본부장이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으로 현황과 위기의식을 공유했으며, 이어 진 자유토론을 통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현안과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차원의 새로운 성장분야로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감을 확보해 기존산업들에 대한 성장추진과 고용안정화를 가져오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산GM공장의 위기 여파와 자동차 업계의 수출부진, 생산량 감소 등 완주군의 산업구조에 대한 우려도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며 "완주군 자동차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지속적인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생발전협의회는 완주군 산업경제의 중심인 현대자동차전주공장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의 지속발전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산업 주체들의 포괄적 협력과 동의의 속에 실행가능한 공동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자 구성됐다.

/원주=이종복기자

태풍 솔릭 등 집중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8~9월 자연재해 3회 발생으로 피해액 34억원 집계 농경지 피해 등 재난지원금 도 예비비 2.5억원 조기지원

전북도는 지난 8~9월 제19호 태풍 솔릭과 28일~9월1일 및 9월3일 집중호우로 총 34억 원의 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복구비로 6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반파·침수 28동, 농경지 유실 6.1ha, 농작물 및 산림자물 침수 730.7ha,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피손 10개소 등 총 5,07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비탈면 유실 9건, 산림유실 52건, 기타 축대 등 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3~24일 태풍 솔릭이 전북도

를 통과한 이후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8.28일부터 9.4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렸고 10일간 도내 평균 강수량은 384.9mm 이고 올해 총 강수량의 32%가 이 기간에 내렸다.

전북도는 그동안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용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으로 총 61억 원을 확정했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21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와 시·군은

각각 예비비로 20억 원씩을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853세대에 11.3억 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용자금 총 2.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에 대한 용자금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용자차라 간소화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통신타당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도로 9건 등 총 64개 폐해시설에 49.6억 원(국비 15.3, 도비 17.8, 시·군비 16.5)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경제위기 상황 극복

송하진 도지사는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주요기업 CEO(10명)를 초청하여 전북 경제정책방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북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진안군의회 행감특위위원장 김광수 의원 선임

진안군의회(의장 김갑수)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간사에 강은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

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율 환원촉구 건의안 채택

2014년부터 신규·계속사업 구분 없이 60→50%로 국고보조율 일률 하향



"감기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재정이 암에 걸린 지방재정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과 재 없이 적용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커져 열악한 재정여건에 놓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나인권의원은

/김진성기자

전라북도의회가 18일 나인권 의원(김제2)이 발의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핵심 축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조정 이 전인 60% 수준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해당 재해예방사업들에 대한 국고기준 보조율을 10% 하향 조정하여 2014년부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구분 없이 적용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커져 열악한 재정여건에 놓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나인권의원은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